

제주도 농민경제에 관한 인류학적 전망 *

李 起 旭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류학에서의 농민연구의 이론과 방법에 의거하여 제주도 농민과 농민경제의 특성이 먼저 제시되고 있다. 제주 농민경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전통사회의 경제적 취약성과 연관되고 있다. 자급자족적 생계경제 하에서도 농민들은 기아와 빈곤 속에 있었음을 드러냄으로써 농민들이 속죄양의 위치에서 항상 권력자들의 욕구에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어서 농민경제의 변화의 양상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농민경제의 변화, 수입개방과 경제적 취약성, 농민경제의 전망이 다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개발에 따라 외부 시장수요에 맞춰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한 생계농업자들이었던 오늘날의 제주농민들이 맞게 되는 변화 양상과 경제적 취약성의 문제가 서술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농민경제의 미래가 진단되고 있다.

제주대 교수·인류학

* 이 논문의 일부는 “제주 농민경제의 전망(1)”이라는 제목으로 『제주도』 제98호(1995년 8월)에 게재되었다.

I. 서 언

본 논문은 한국의 지역사회의 하나인 제주 농민사회를 대상으로 농촌부문에의 자본주의 침투과정을 더듬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개입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농민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반도 최남단의 도서인 제주도의 농민들은 오랫동안 외부 지역과 격리된 채로 자급자족적 경제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국가주도의 지역 개발의 결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급속히 휩쓸리게 되면서 단기간 내에 외부 사회의 시장체제로의 종속을 심화시켜 왔다. 생산양식의 변화는 제주 농민경제로 하여금 외부 시장의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하였고 국내 농산물 시장을 세계시장에 개방하면서 제주 농민경제는 해체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개발의 결과로 맞게 되는 이러한 제주 지역경제의 취약성에 관한 경제분석은 Finney(1973)가 타히티 섬의 경제변화를 기술하면서 채택했던 가설로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경제나 외부의 경제력에 취약할 수 있으며 취약성의 요인은 그 경제가 운용되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어느 지역의 경제이든시간에 세계경제력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의 개념은 한국가체계 내에서는 경제력이 튼튼하지 못한 소자본가 경영인들에게, 비교우위 산업에서 제외된 농민, 특히 소농들에게, 그리고 세계체제 속에서의 저개발 국가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소외된 집단들이 대처해 나가야 할 힘들이란 국내적으로는 대자본가들이나 국가권력자들로부터, 국제적으로는 선진국가로부터 내려진 결정에서 유래되는 힘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은 소위 ‘한국의 기적’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60년대 이후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러한 성장이 대외 의존적이고 불균형을 이룬 공업

화 과정이었으므로 국가경제에서 농업과 공업은 각각 균형적인 분업으로서의 공동의 발전축을 이탈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업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이 지속적으로 채택됨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의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시각이긴 하지만 농업의 해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농민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농간의 현격한 소득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빈곤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농가경제의 악화는 이농민을 급증케하는 상황을 야기시켰으며 한국농업은 성장 가능성을 상실해 버린 낡은 산업으로 간주되어 해체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농업 생산양식에서의 차이가 지역에 따른 농민의 다양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가 내에서도 농민사회는 그것이 위치한 환경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생산양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나 농민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큰 사회와는 종속적 관계 속에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지역농민들은 보다 큰 체계인 국가와 정부와의 관계의 형태에서도 각각 상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지역농민을 다루는 정책적 차원도 부분적으로나마 상이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에 따른 농민사회의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농민경제의 발전과 농민사회의 변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여러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국가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의 양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려는 국가의 정책이나 지역 외부의 힘에 의한 발전에 관한 지역민들의 반응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전제로 제주도 농민경제의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주도의 농민은 일제통치로부터 해방되면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휩쓸리게 되어 도서사회의 고립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적 생계경제체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통사회의 제주 농민들이 안고 있었던 경제적 취약성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기술된 농민경제에 관한 상세한 기술은 전통사회의 상이한 생산양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서로 다른 미시적 환경 하에 있는 표선면 토산 2리, 제주시 영평동과 대정읍 가파리 등 세 마을에 대한 다년간에 걸친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얻어낸 자료와 그 밖에 제주도 각 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발간된 문헌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들 농민마을의 사례는 제주 농민의 생계활동에서의 다양성을 제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로 야기된 농민마을의 상이한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되었다.

농민경제의 변화의 양상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면 전통사회의 빈곤의 상황을 개선하고 누적된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시도된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이 농민경제의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시킨 동인이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제주도의 부존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외부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에 힘입어 도로의 개설 및 기존 도로망의 확장과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용수개발, 동력개발, 항만과 항공시설의 개선 등 사회 기간 산업이 개선되면서 지역 농수산물의 육지부로의 수송이 용이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도내 시장에서 자급자족적 소비를 목적으로 유통되던 제주 특산 농수산물은 육지부의 거대 시장의 수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주 농민들은 이러한 경제기회를 인식하고 소득향상을 위해 환금작물의 재배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때나마 제주 농민들은 비교우위를 점유하던 제주산 농산물을 국내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해 냄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던 전통사회의 경제적 취약성은 퇴치되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농민경제발전예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주 지역개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러한 문제 중에 가장 절박한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는 개발의 결과로 야기된 농민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보다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의 문제이다. 더욱이 UR협상의 타결로 개방화의 시대를 맞게 되면서 제주 농민경제는 생계경제 하에서보다 더 심각한 취약

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의 실태를 소상히 밝히고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소위 세계화 시대의 시장경쟁 전략을 제시하면서 농민경제의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류학에서의 농민연구의 이론과 방법에 의거하여 제주도 농민과 농민경제의 특성이 먼저 제시되고 있다. 제주 농민경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전통사회의 경제적 취약성과 연관되고 있다. 자급자족적 생계경제 하에서도 농민들은 기아와 빈곤 속에 있었음을 드러냄으로써 농민들이 속죄양의 위치에서 항상 권력자들의 욕구에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어서 농민경제의 변화의 양상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농민 경제의 변화, 수입개방과 경제적 취약성, 농민경제의 전망이 다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개발에 따라 외부 시장수요에 맞춰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한 생계농업자들이었던 오늘날의 제주농민들이 맞게 되는 변화 양상과 경제적 취약성의 문제가 서술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농민경제의 미래가 진단되고 있다.

Ⅱ. 농민의 개념과 농민경제의 특성

1. 농민의 개념

전세계의 농민들을 연구해 온 인류학자들 사이에 농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시골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Wolf 1966)을 농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이 농민들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전문적으로 이윤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민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가적인 농업경영가들은 우선적으로 농민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제주도 농민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오늘날의 제주도 농민들이 이러한 전통적

인 인류학적 농민의 개념과 위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 세대 내에서 생계농업자들인 농민들이면서 상업농업으로 전환한 그러면서도 토지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농민들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농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친족이나 동료들 사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한다고 해도 농민으로서의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려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되 반드시 자신의 집단보다 큰 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다 큰 사회란 국가조직의 중심부이거나 도시의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엘리트 집단을 말한다. 중심부의 사회는 문화적으로 대전통(Great tradition)으로 지칭되는 고등문화 영역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곳으로서 이러한 전통은 농민마을의 소전통(Little tradition)과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흔히 농민사회는 “부분문화를 갖는 부분사회”(Kroeber 1948: 286), 혹은 “도시와 농촌의 연속체”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농민은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즉 그들은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생계지향적인 사람들의 집단인 공동체사회에서 진행되는 바에 관심을 갖고 생활해야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공동체 밖의 세계에 의존하여 정치권력 자들이나 거대자본가 혹은 종교지도자들의 요구에 순응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빌자면 다음의 네가지 상호연결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될 수 있다. 즉 농민은 “사회조직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소규모 생존수단으로서의 토지경작과 가축사육을 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촌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고”, 끝으로 “자신들보다 강력한 외부인에게 여러면으로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보다 큰 사회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농민사회는 외형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치적인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Shanin 1973). 흔히 농민은 미약한 자원의 한

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대체로 가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들은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가족노동을 이용해서 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혹은 정치나 경제의 권력자에 대한 의무수행을 위해 생산하는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을 지칭한다.

2. 농민경제의 특성

앞서 농민이란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토지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들에 얽혀 사는 외부인들에게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경제활동에서 가족은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노동단위를 구성한다. 농민가족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노동으로 처리되는 소규모의 생산에 전념하면서도 소비의 단위가 된다. 분업은 가족의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성과 나이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활동에서의 전문화는 낮은 수준에 있다. 개별가족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단위이고 마을은 구성원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 즉 가족 단위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 및 기타의 서비스는 마을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농민경제는 자급자족적 경향을 가지며 가구는 집약적 가족노동에 기초한 생산과 소비의 주요 단위가 된다. 이러한 두가지 근거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농민은 생산물을 자본주의 시장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기업가적인 근대 상업농과 구분된다. 농민의 토지에 대한 관계는 농업생산의 고유한 특성을 이루며 농민경제의 몇가지 특징의 기초를 이룬다. 농장에서의 생산물은 농민가족의 기초적인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농민으로 하여금 다른 생산자나 시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농민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며 위급한 경우가 닥쳐도 더욱 노력하거나 소비를 줄이고 그들이 맺고 있는 시장관계에서 손을 뗌으로써 독자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농민경제에 있어서 생산단위의 제일 첫번째 관심은 자급자족을 위

한 곡물의 재배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일 수 없다. 정의상, 그들은 한 국가 내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불가분하게 국가나 도시, 그리고 지주를 먹여 살려야 한다. 따라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그들은 자기의 생산물의 일부분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팔아야 한다. 비록 그 교환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농민이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을 것이지만 그들은 이 대가로 자신들이 생산할 수 없는 일상 필수품의 최소치들 이를테면 소금, 양념 또는 새 옷가지 등 생활필수품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농민경제는 분명히 생존 지향적인 측면과 시장 지향적인 측면을 겸비하고 있는 이중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3. 농민의 입장

동남아시아 지역의 농민 반란에 관한 한 연구서의 서두에 인용된 중국 농민을 묘사하는 글은 대체로 전세계 농민의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즉 “농민이란 목에까지 물에 잠긴 채로 영구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잔물결만 스쳐도 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Scott 1976:1). 여기에서 농민들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에 위협적인 잔물결 제거에 급급한 나머지 소득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재난의 가능성을 극소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임이 암시되고 있다.

우선 농민은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그 특성이 정의될 수 있다. 즉 농민이란 단순히 들판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는 ‘일손’들로 이루어진 생산조직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숫자보다도 더 많은 ‘입’들을 거느리고 있는 소비의 단위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농민들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많은 식솔들을 먹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칼로리 및 대체용 자금과 더불어 좁은 농민세계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례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의 필요성은 사회,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농민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의 요

구에 따라야 한다. 즉 농민은 자기의 필요와 지배자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균형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긴장의 제물이 되기도 한다. 외부 지배자들의 눈으로 보자면 농민이란 무엇보다도 자기의 권력 유지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물자의 원천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농민들이 잉여를 생산하는 방식도 다양하지만 지배계층이 농민계층으로부터 잉여물을 착취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농민을 둘러싸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다름에 따라서 농민들의 조직도 구조적으로 다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방식도 똑같지 않고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농민이란 말은 잉여생산자와 지배자 사이의 불평등한 구조적 관계를 가리키는데 지나지 않는다.

농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영원한 어려운 문제는 이처럼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자신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외부세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쳐 농민들은 다음과 같이 상반된 두가지 전략을 채택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다. 첫째는 생산량을 늘리는 전략이며, 둘째는 소비를 줄이는 전략이다. 첫번째 전략을 따르자면 자기 땅에 투입한 노동력의 산출을 올려 생산성을 높여 시장에 내놓을 생산물의 양을 늘려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능력은 생산에 필요한 요소, 즉 토지, 노동력, 자본을 얼마나 쉽게 끌어대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일반적인 시장조건에 따라서도 이런 능력이 좌우된다. 농민들은 잉여를 우선적으로 의례비용이라든가 지대 지불 등에 써야 하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은 매우 쪼들리게 마련이다. 자기의 경제적 능력만으로써 외부에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산수준을 높이기란 불가능한 일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힘겨운 노릇이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생산증대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할 때는 우선 농민에게 지대 자금을 거두는 전통적인 취득권이 약화될 때이다. 농민의 생산물이나 자금을 짜내는 전통적인 지배계급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즉 농민에게 엄혀 있는 권력구조가 약화될 때 생산증대를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로 생산증대의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을 상황은 농민들이 의례용 자금을 투입하여 동료들과 전통적 사회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에 역시 조성될 수 있다. 농민들이 잉여를 의례비용으로 지출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경제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생산증대의 전략 외에 잉여를 창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전략으로써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농민은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제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식단으로 연명하고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한다. 자기 집 테두리 안에서 집안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식량과 필요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수지균형을 맞추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농민들의 이러한 절박한 노력을 살펴보면, 결국 무엇 때문에 농민들이 전통적 생활방식에 집착하며, 보수적이며, 왜 새로운 것을 보면 유혹을 회피하듯 꺼리는 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의 위태로운 균형상태는 어떤 사소한 새로운 것의 도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며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농민들의 두가지 생활 전략이 정반대 방향을 겨냥한다고 해서 그 두가지 전략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어느 전략이 더 우세 하느냐 하는 것은 크게 보아 그 농민이 살아가는 보다 큰 사회체제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한 사회체제가 강화되거나 약화됨에 따라 그 농민들은 하나의 전략을 따르기도 하며,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채택하기도 한다.

Ⅲ. 제주도 농민과 농민경제의 특성

1. 농민의 역사적 측면

제주도 인근의 한 도서 마을에서 이루어진 성역할에 관한 한 인류학자의 연구결과(조혜정 1982, 1988)는 제주농민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즉 “경제구조의 특성으로는 남성들 간의 협동이나 부권적 권위와는 거리가 먼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구조로는 양편 비우세 사회 즉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파트너로서 책임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평등사회의 모형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마을에서의 경제활동은 역시 농업과 어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두가지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행함으로써 육지부의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집약적 농경사회와는 상이한 사회로 설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섬마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 농촌사회 전반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제주 사회에서의 경제구조는 농업위주의 복합적인 생계경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제주 농업은 “여성적 농업체계”(조혜정 1988)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농업생산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주 농업은 육지부의 관개수리 사업과 축력을 토대로 한 남성중심의 미작농업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 농민은 농업을 주식생산의 토대로 삼으면서도 해변 마을에서는 어업을, 중산간 마을에서는 목축업을 모두 중시하여 활발하게 행하며 사회 변동에 따라서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어느 한 부문에 노동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생계전략에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경제구조를 이루어 왔다. 물론 여기에서 경제부문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한국 내의 타지역과 상이하여 제주 농민사회의 특성을 이루는 점이 주목된다.

제주도의 생계경제는 자본 집약적이라기 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경

체체계였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민이 부를 축적하기 쉬운 지역이고 농민들이 근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찌들리는 생활을 이어 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이유들로서는 도서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태풍, 한발 등의 자연재해의 영향과 농민들에 얽혀 사는 정치 권력자들에 의한 수탈 그리고 왜구의 노략질 등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주농민도 농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을 공유하며 중심부 국가에로의 예속과 지배계층의 구속력에 대한 적응과 저항 그리고 좌절의 긴 역사 과정을 나누어 갖고 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주 농민들을 역사적으로 개관해 보기로 한다. 제주 선주민들의 도서 내외의 거주역사는 발굴되는 유물로 미루어 보아 구석기시대에까지 소급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해안가의 여러 지역에서 발굴되는 패총이나 토기류들과 그 밖의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신석기 후반기에 이르러 육지부로부터의 대대적인 인구의 이주가 이루어졌고 이때 농업도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이청규 1985). 초기 농경민들은 해안의 풍부한 해산물을 이용하면서 아울러 농업에 전념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겐 원래 부족국가인 탐라국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독립국가는 고려 때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해 오다가 고려 문종 3년(1052년)에 국호가 폐지 당하고 고려의 일개 군으로 편성되었고 의종 7년(1153년)에는 군에서 현으로 개편되고 행정적인 통치권도 성주인 왕자에서 현령으로 이관됨으로써 제주는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려의 중앙집권적 통치체계 하에 놓이게 되었다(제주도지 1982 상권: 9-106). 고려 원종 때에는 삼별초군이 제주로 진입하여 제주를 거점으로 최후의 항쟁을 전개하였는데 막대한 노역과 물자가 삼별초군에 의해 징발 당하였다. 난을 진압한 후 여몽연합군으로 제주에 진출한 원나라가 제주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100여년 동안 몽고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제주인들은 공현과 노역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변방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중앙집권체제 아래 철저히 통

제되었고 조정은 제주에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을 두어 중앙에서 파견된 행정관으로 하여금 제주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탐라국이 붕괴된 12세기초부터 이조 말에 이르기까지 8세기 동안 500여명에 이르는 목민관들이 제주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농민들을 착취한 오리들이었다고 한다(현길언 1986). 오리(汚吏)들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 토호세력이나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지 못한 제주에서는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지역의 유력인사들은 관리와 결탁하여 도서민들을 오히려 수탈하였으므로 서민들의 생활은 참담하였고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연히 섬을 빠져나가고자 하였다. 이들 출륙민들의 이주가 증가하게 되자 조정은 왜구에 대한 방어책으로 제주인들에게 ‘출륙금지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제주인들은 200여년 동안 도서 내에 발이 묶인 채로 엽매이게 되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고립된 도서지역인 제주도의 농민들은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한해 등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 재해를 해마다 겪어야 했으므로 아사지경에 처한 농민들에 대한 구제 기록이 사서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왜구들의 노략질은 해안지대의 거주민들의 생활을 황량하게 하였다. 게다가 제주인들의 생활을 더욱 참담하게 했던 것은 중앙관서에서 정하는 각종 제주 특산물의 진상요구였다. 특히 감귤과 전복 그리고 공마의 진상과 관련하여 지방관리들의 횡포는 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좌절케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하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제주도가 일본의 전략적인 요충지역으로 여겨져 기지화 되면서 대규모의 일본군인들이 제주에 진주하였고 이들 역시 농민들로부터 식량뿐만 아니라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제주인들에게 노동력 동원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제주도가 지닌 존재 가치에 대하여 향토사학자 김태능의 지적은 제주농민 사회의 입장을 잘 요약하고 있다. 제주도는 “군마와 양마의 목양 공급지와 방물 공급지였으며(감귤·전복·진주·녹피와 한라산의 특수 입목과 여자의 탈구 등) 또 수많은 각사 노비의 신공으로 미와 포를 바치던 곳, 환언하여 말하자면 중앙에 있는 지배자

들의 생활비를 조달하고 사치품을 제공하는 지역이었고 왜적방어의 제일선 군역을 맡은 지역이었던 곳이다”(조혜정 1988의 글에서 재인용 한 것임).

2. 제주 농민가족의 특성

제주도의 농민가구와 가족은 철저하게 노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분가제도에 토대를 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한 가구내의 가족은 경제단위로 구분되는 두 세대의 사실상의 핵가족을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 가족은 ‘대내적인 실제 가족’과 사회적으로 공인된 ‘공적 가족’으로 구분되곤 한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실제 가족이고 거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공적 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가족은 실체는 핵가족이고 외형상으로는 직계가족이라 하였다(이광규 1984). 이러한 복잡한 가족의 형태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선 혼인한 자식은 분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분가할 거주지가 마련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이고 동거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와 경제적인 생활을 구분함으로써 핵가족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주도 가족의 특성은 철저한 분가 원칙에 입각한 핵가족적 성격에 있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안거리에 있던 밖거리에 있던 자기들만의 식생활을 영위하고,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는 시부모와는 별도의 취사단위를 형성한다. 시부모는 동거하는 미혼자녀와 더불어 취사단위를 이룬다(이광규 1984). 혼인과 더불어 시부모 식구들의 취사를 전담해야 하는 육지부의 풍습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제주도적인 가족제도의 특성이다.

제주도의 이러한 분가의 원칙은 희소자원 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기욱 1984). 제주도의 토지자원의 상당 부분과 어장이 공유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토지에서의 생산성이 낮아서 복합적인 생계활동에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자원이용 과정에서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는 것은 토지나 자본이 아니라 육

체 노동력이고 이러한 생산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생계의 전략이 된다. 도서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이나 종류에도 한계가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의 자원에서의 생산성마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소수 인원의 노동력만으로는 대가족의 부양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핵가족의 형태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최소 생산단위로 분산함으로써 생계활동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제주도 가족이 여성중심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노모가 독자적인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기혼여성이 생활전반을 이끌어 가는 모중심적 가족이라는 데 특유한 성격이 종종 지적되고 있는데(이광규 1984, 조혜정 1982) 이러한 지적은 경제생활에 있어서 제주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입증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재산의 분배에 관련된 특성 역시 핵가족 중심의 가족 노동에 토대를 둔 생계경제체계의 가족농업 생산양식과 긴밀하게 관련되고 있다. 제주도의 재산 상속은 대체로 한 가족 내의 여러 아들들 사이에 균분을 원칙으로 하는 균분제적 상속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부모가 미리 아들들의 상속의 몫을 생각하여 두었다가 첫아들부터 일정 분의 재산을 나누어주되 차남이나 삼남도 가옥이나 토지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으며 이들의 몫은 장남이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고 부모가 미혼자녀와 더불어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사례나 결혼한 장남에게 안거리를 물려주고 부모가 밖거리로 나오는 사례는 제주도적인 독특한 상속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육지부에서와는 달리 제사 상속도 장남에게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아들 사이에 역시 균등하게 상속되는 것이 제주도의 제사상속의 보편적 현상이다. 제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자가 물려받는 제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장남의 상속부분이 다른 아들들 보다 많게 된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중에서 특정 조상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여된 위토인 제월전과 조상의 분묘에 제조작업을 위해 마련된 소분전의 상속은 그 밖의 개별재산의 상속

과는 별도로 제사나 소분을 떠맡는 아들에게 상속된다. 이러한 제사와 소분을 장자가 맡게 됨으로 장자상속분이 많아지게 된다. 제사상속에 있어서 夫의 제사는 장남이, 母의 제사는 차남이 맞는 게 통상적인 일들로 여겨지고 있다. 가족원들은 핵가족의 경제단위로 구분되고 있으며 재산의 분배는 가족내의 역할의 분배와도 관련되고 있다. 제사의 분배는 바로 독립된 경제단위에 부여되는 역할분배의 양상이다.

3. 자원이용의 양상

농민들의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핵가족의 가족노동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졌다. 가족노동은 성별 분업화되고 있으며 농사일에서도 이러한 성별분업이 적용되고 있었다. 가령 남성은 밭갈이, 마차 운영, 목축을, 여성은 김매기, 수확 농산물의 저장 및 처리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다. 가족노동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일들의 경우 마을내의 주민들 사이에 호혜적인 교환노동인 수눌음(품앗이의 제주어)을 통해 처리되었다. 농촌 마을이야말로 모든 호혜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초자연적인 보호 하에 있는, 공동의 이념이 키워지는 농민들의 생활의 터전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주 농민마을은 마을경내의 미시적 생태환경의 특성에 적응하며 환경 내의 상이한 자원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생계방식을 이어왔다. 각각의 마을들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고도에 따라 구분되는 상이한 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제주도의 지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고도에 따라 해안지대(표고 0-200m), 중산간지대(200-250m), 산간지대(350-600m) 그리고 산립지대(600m 이상)로 구분된다. 해안지대는 경사가 가장 적고 토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경작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중산간 지대는 경사도가 해안지대 보다 높으며 반경작, 반방목지대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산간지대는 우마의 방목을 위해 이용되었던 지대로 경사도는 그밖의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높다(제주도지 1993 제2권: 777). 이러한 위치에 따라서 마을들은

대체로 해안지대 마을, 중산간지대 마을 그리고 산간지대 마을로 구분된다. 섬 중심부에 솟아 있는 남한 제일봉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토질의 비옥도는 고도에 따라 상이성을 보이고 있으며 생계활동의 유형은 이러한 자원의 양상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세 부류의 마을들은 이렇게 고도에 따른 서로 다른 미시 생태계를 점유하고 있어서 기후, 토양, 자생하는 동식물 군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민들은 여기에 적응하며 경내의 상이한 자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생계활동을 수행해 왔다. 농민들은 각 지대의 토양의 질에 알맞은 독특한 형태의 경작방식과 생계방식을 이어오고 있었다. 섬 주변 253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마을에서는 각각의 마을 몫으로 구분되는 제1종 공동어장 구역에서의 잠수업, 공동어장 구역을 벗어난 연안에서의 어로작업, 그리고 해안지대와 중산간 지대에서의 밭농사와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해안지대의 논농사, 산간지대에서 이루어지던 화전농업, 그리고 중산간 지대와 산간지대에 걸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목장지대를 이용하는 목축업,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수렵활동 등 다양한 생계활동을 소규모의 가족노동으로 수행해 나갔으므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분업도 독특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안마을에서의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자원을 이용하는 농업과 해양생태계 내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과 잠수업 등 보다 유리한 생계활동을 행할 수 있었다. 어업은 원시적인 뗏목 어선인 테우를 이용하는 연안어업과 마을 주변 공동어장 경내에서의 해조류나 패류를 채취하는 잠수업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도 전자의 일은 남성이, 후자의 일은 여성이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어서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분업의 양상은 농업에서보다도 더욱 분명히 구분되고 있었다. 또한 경작에 필수적인 가축까지도 농가 단위로 사육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농민들은 복합적인 생계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산간지대의 마을에서의 농민들은 중산간 지대의 광활한 목장지대를 이용하는 목축업과 축력을 토대로 한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

다. 해안지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척박한 토지여서 생산성은 낮았으며 경작 시에 지력이 쉬 약해져 잦은 휴경을 거쳐야 경작이 가능하였다. 끝으로 산간지대에는 이제는 사라졌지만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곳곳에 들어섰던 산촌의 화전민들이 이 지대의 숲과 목장지를 이용하며 목축업과 원시적인 농경 방식에 의존하는 이동식 농업형태인 화전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화전민들은 농업이나 목축 이외에 한라산의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료공급, 표고 재배, 수렵 등을 행하고 있었다.

이들 세 부류의 마을들에서는 노동형태나 노동주기, 생업활동과 관련된 의례에서도 각각 어느 정도의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견상 생활 유형이 다르게 보이는 마을들에서도 주민들이 모두 농업에 의존하고 땅을 갈며 주곡인 농산물 생산에 의존하여 자급자족적 생계경제를 이어 왔다는 점에서 이들 세 유형의 제주의 마을들은 모두 농민 마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4. 유통조직

조선조를 통하여 제주지역에서 유통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상인은 보부상이었다. 시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보부상들은 상품집산지에서 일용품을 구입하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마을을 찾아다니며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의 방식으로 공급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농업이 기간 산업으로 장려되었으므로 어느 지역에서나 농민경제는 그 기반이 토지에 바탕을 둔 자연경제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조업의 발전은 자연 억제되었으며 상업도 따라서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주인들의 경우 육지부로의 통행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출륙금지령 하에 생활해 왔으므로 제주인들에 의한 상업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무려 200년 동안 제주와 육지부간의 교역은 주로 외지인 상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출륙금지령이 해제된 구한말까지도 육지부와 제주를 왕래하던 보부상들 중에 제주 본토인은 한사람도 끼

어 있지 않고 있음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전통사회에서는 모든 생산물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산자의 자가수요를 위해서이거나 지배계층에 대한 공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되고 있었으므로 자가소비와 권력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잉여물은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의 교환에 한정되어 이용되었을 뿐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서사회의 특수성에 의해 본토와는 원거리로 격리되어 있어서 교통상의 제반 제약조건이 상거래를 위축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로 제주지역의 상거래 활동은 지극히 낙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객주, 보부상에 의한 상거래가 지배적이었는데 제주도에 있어서도 이들이 상업활동의 중추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과 같이 시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본토에서 구입한 물품을 보부상들이 지금의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해변과 산간오지에 흩어져 있던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공급하였다. 제주지역에서 보부상이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교환경제의 중추적인 존재였다.

일제 통치하에서 제주도의 상권은 일본인들이 독차지하였고 한국인은 대부분 그들에게 고용된 임금 노동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독립하여 상행위 하는 제주인들의 상거래 방식은 지극히 전근대적이고 소규모에 한정되어 있어서 생계유지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자본주의적 상거래는 제주인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해안일주 도로의 신설로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재래시장인 오일장이 곳곳에 개설되어 도내에서의 상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제주의 상업은 4·3사건 및 6·25동란 등의 사회적 혼란으로 더욱 침체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회복함과 더불어 산업시설이 복구되어 생산기반이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농산물을 비롯한 제반 물자의 생산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증가된 생산물은 자가소비의 수요량을 초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또한 교통의 발달은 육지부 시장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였다. 제주의 유통구조는 새로운 기반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제주시에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이 개설되었다. 이 두 시장이 들어서면서 제주시가 제주도 전체 상업활동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제주의 상업활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상설시장은 도내 다른 곳에도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본토로부터의 상품반입도 활발해져서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제주지역 개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고 개발의 여파로 오랫동안 고립된 채로 침체 상태에 있던 제주지역에서도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역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의 제반 분야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상업활동도 아울러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제주도의 상업은 빈약한 도세와 도서지방이라는 지리적 제약요인을 안고 있는 데다 도내의 생산기반의 영세성과 생산된 상품의 조야함, 그리고 유통구조의 취약성으로 국내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는 대체로 자본 규모가 작고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기업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매업소의 경우는 상당수의 잠재 실업자들이 상업인구에 포함되고 있어서 소매상의 바람직한 발전유형인 전문화와 대형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시장도 규모의 영세성, 시설 및 환경 이용의 전근대성, 긴요한 조직과 운영의 다원화의 미흡, 재무구조의 취약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러한 유통부문에서의 문제점들은 바로 제주경제의 취약성과 연관되고 있었다.

5. 전통사회에서의 농민경제의 취약성

앞서 우리는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민과 농민경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통사회의 자급자족적 경제 하에 농민들이 안고 있던 경제적

취약성은 무엇보다도 낮은 생산성과 이로 인한 빈곤의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면 50년대의 제주도 농민 사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농민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에 주민들의 절박한 입장을 표현하던 용어인 춘궁기에 ‘보릿고개 넘기기’라는 말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다. 매년 봄이면 추곡이 바닥나고 하곡인 보리 익기를 기다리는 춘삼월부터 오월까지의 견디기 어려운 궁핍한 시기가 바로 보릿고개로 표현되고 있었다. 특히 50년대의 제주도 농민들이 겪었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는 상대적으로 60년대 이후의 경제적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지표가 될 수 있다.

1950년대의 제주사회의 경제여건을 어렵게 했던 것은 일제 통치가 남긴 유산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해방후의 사회적 혼란이었다. 1947년 3·1절 기념식을 갖고 시위에 들어간 군중을 향해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시위사건은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로 비화되면서 급기야는 당시 도지사가 경질되어야 하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동질적인 공동체 사회의 이웃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극심한 좌우익간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은 제주사회에 커다란 재난을 몰고 온 4·3사건으로 이어졌다. 7년간 계속된 살육전은 사망자만도 공식적인 통계로도 27,719명에 이르게 하였으며 중산간부락의 소개령에 의해 발생한 이재민도 전체 호수의 35%에 해당하는 19,934호에 이르게 하였다. 그밖의 이유로 소실된 가옥수도 39,285동이고 이에 따른 이재민은 91,700명에 이르렀다. 가축 피해만도 109억9,900만원이었으며 농경지는 황무지로 변하여 경작지로는 이용될 수 없게 되었다(제주상공회의소 1991).

게다가 1950년 6·25가 발발하여 제주에는 밀려드는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입도한 피난민들은 10만명을 넘어섰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해마다 흉작과 재해가 겹쳐 절량농가가 속출하였다. 50년대의 도정 전반기는 구난행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유통구조도 마비됨으로써 산업활동은 완전히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 4·3사

건이 진압되면서 제주사회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으나 무려 7년에 걸친 전화로 인한 파괴를 복구할 예산이나 민간자본이 부족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전화복구에 주력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였다. 그러나 50년대 후반기부터 국내의 산업시설이 복구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산업활동도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피난민들의 영향으로 근대적 상권의 모습도 갖추기 시작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상설 시장이 들어섰고 육지부로부터 상품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9년까지 4개소의 상설시장에 불박이 가게가 630여개 있었으며 5일장은 1950년에 전도에 걸쳐 23군데에 서고 있었다. 1952년 처음으로 제충국과 선어의 대일수출이 시작된 것을 효시로 1957년도의 제주항은 활선어 수출항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1950년대의 연육과 물동의 운송수단은 산지항을 거치는 해운 위주였다. 모든 산물의 반출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상공활동은 1960년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제주도의 50년대를 회고하면서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건은 이 기간 동안에 거듭된 자연재해이다(제주상공회의소 1991). 4·3사건과 6·25동란으로 야기된, 소위 인재(人災)에 의한 사회적인 혼란과 더불어 다섯차례의 큰 흉년과 대기근의 자연재해는 제주 경제의 저 발전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었다. 1952년, 1953년, 1955년, 1957년, 1958년에 잇달아 흉년이 들었고 1957년의 흉년은 40년만의 대흉년으로 농민은 기아 상태에 시달려야 했다. 흉년으로 얼룩진 제주에는 1957년도의 경우 제주시만 해도 1,400세대 6,500여명의 절량민이 발생했을 정도이다. 1950년대의 제주도민은 주산업으로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여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영농구조 자체가 식량 자급을 위한 잡곡생산 위주의 영세농업이었다. 매년 춘3월이면 보릿고개가 어김없이 찾아 들었다. 6·25동란을 겪으면서 설상가상으로 1951년 초가을 태풍이 지나가자 추곡생산량은 계획량의 50%선으로 떨어졌고 다음해 2월에는 벌써 절량사태가 제주 인근 도서지방과 조천, 구좌, 한림 등지로부터 전도로 파급되었다. 1952년의 흉년에는 절박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도당국은 곡식을 원료

로 한 주류제조와 음식점에서 쌀밥 파는 일까지 전면 금지시켜야 할 정도였다.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환마량곡제가 실시되었다. 이 환마량곡제는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조랑말의 육지반출을 허가해 주어 말을 팔고 식량을 사들여 오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였다. 잡곡의 도의 반출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초여름의 심한 가뭄과 8월 17일의 태풍으로 추곡 작황도 나빠 제주도는 추곡 감수율을 벼 60%, 콩 60%, 조 60%, 고구마 58%라고 발표했고 당시 피해액은 140여억원에 이르렀다. 이어 1953년의 절량상태는 굶어죽는 사람들과 문전걸식하는 사람들의 수를 급증하게 했다. 전분찌꺼기로 목숨을 잇거나 파래, 톳과 같은 해초와 좁쌀로 죽을 끓여 주린 배를 채우는 가정이 태반이었다. 1953년도 3월에는 구호 대상자가 42,000여명으로 늘어났고 마을마다 '입맥선매' 현상이 일어났다. 좁도둑이 늘어나고 이해 3월 23일 한경면 어느 마을에서는 구걸하는 노모를 차마 보지 못해 살해하여 매장해 버린 '살모매장사건'까지 발생하여 당시의 참담한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실감케 하였다.

제주시와 구좌읍 그리고 애월읍에 극심한 피해를 가져온 1955년의 흉년으로 인해 다음해 1월말 도내 농가 46,099세대 중 4,760세대가 절량민으로 전락하였다. 정부는 춘궁기 대여환곡 4,800섬을 풀어 절량민들을 구호했다. 이듬해인 1956년 9월 제주도를 덮친 태풍은 40년이래 가장 큰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서 이듬해인 1957년에 대흉년을 몰아왔다. 제주시 1,400여 세대 6,500여명과 조천읍 중산간부락 주민의 50%가 끼니를 잇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햇보리가 나오는 그해 6월까지 무려 45,242섬 정도의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밀가루 3,200포대를 긴급히 배정하여 이재민들을 구호하였고 천주교회에서도 옥수수 5백포대를 구호품으로 급송하였다. 1957년 2월 도당국은 절량도민을 위한 의연금품 모집과 대용식량 도입 및 구호양곡 배정 등을 중앙에 호소했다. 이해 4월말 통계에 의하면 농촌인구의 58%인 25,084세대의 123,686명이 절량상태였으나 5월20일에는 15만여 명으로 늘었다. 1957년 1월부터 6월까지 방출된 양곡은 46,000여석에 이르렀다. 보리 수확량은 계획량보

다 20% 감수했고 추곡도 30% 감수된 31,300석에 지나지 않았다. 1958년 들어 도당국은 정부로부터 대여곡 1만석과 구호곡 등을 배정 받아 카드제로 방출했다.

1959년 9월 17일 또다시 태풍 사라호가 제주도 전역을 강타했다. 이 태풍은 갑인년 흉년이래 최대의 천재로 도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 주었다. 사라호 태풍은 최대 풍속 39.2m/s에 이르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서 1933년 태풍(최대풍속 30.1m/s 강우량 1백62mm)이후 26년만에 덮친 자연재해였다. 이 태풍은 인명피해 118명(사망·실종 11명, 부상 1백7명)에 32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7,500세대, 33,436명의 이재민을 냈다. 태풍 사라호는 모든 생계수단을 일시에 붕괴하고 기아에 찌든 농민들을 비참한 궁핍의 상황에 몰아 넣었다.

이러한 인재와 자연재해에 직면하며 기아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주농민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의존하며 겨우 생계유지에 급급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도 농업은 제주도민들의 기간산업이었으나 자급자족적 생계유지에도 제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1950년대의 영농구조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잡곡생산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 형태가 지속되었으며 농업 경영방식도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영세농업 경영 방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었다.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대책의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며 생계농업에서의 농작물의 생산량이나 상품가치는 보잘 것 없었다. 농업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나 전체인구 증가율에 대비해 볼 때 훨씬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일제하에서부터 전체 인구 중에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져 해를 거듭할수록 농민 인구는 줄어들고 있었다.

IV. 생계경제의 요약

지금까지 인류학의 농민연구의 이론과 방법에 입각하여 제주 농민과 농민경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농민들의 전통적인 생계양식은 토지를 이용하는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해양생태계를 이용하는 어업과 잠수업으로 구분되었다. 다양한 생계양식은 마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생계활동의 차이는 마을이 점유하고 있는 미시생태계의 특성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노력과 관련되고 있다. 전통적인 생계양식은 가족노동을 토대로 한 마을경내의 자원이용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자원이용의 전 과정은 원칙적으로 각 농가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농가는 부부의 노동력을 토대로 한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의 양상은 남성과 여성의 일로 엄격히 구분되는 성별 분업 구조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 생계경제 하의 농업노동은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전담하였다. 풍토적 여건으로 농업생산에 있어서 경작지의 제초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했고 제초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서는 적절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여성들이 전담함으로써 생계경제 하의 농업생산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타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해산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성별 분업구조는 엄격히 지켜졌다. 여성들은 바다에서 해조류와 패류를 채취하는 물질작업을 전담하였고 남성들은 테우를 이용한 어로작업을 역시 전담하였다. 남성들이 전담하는 영역은 목축업의 모든 일들과 농업에서는 밭갈이, 수확물의 운반 등 여성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전담하고 있었다. 가구단위로 처리되는 농업생산에서 노동력의 부족은 마을 내의 가구들간의 유희노동력을 호혜적으로 교환하며 처리하였다. 마을은 노동력이 교환되는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물건과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곳이며, 재난이 가득한 생활 속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역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전통사회의 제주 농민경제는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단순한 저생산의 구조와 농민을 둘러싼 권력집단의 가혹한 착취 구조 속에

취약성을 띠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저생산의 구조는 세가지 사실과 연관되고 있다. 첫째 요인으로는 제주 지역에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도서 내의 자원이 갖는 생산성에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은 상호 연관되어 농민들의 빈곤의 영속화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의 요인은 농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큰 사회의 힘들, 즉 농민들을 희생양의 위치로 몰아넣고 있는 정치·경제 권력자들의 영향력으로 파악되었다. 농민에 얹혀 사는 이들 권력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하며, 진상, 공출 등으로 농민을 착취했었고 이로 인해 농민의 생활은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빈곤의 경제, 소비를 위한 생산의 경제, 생산단위이면서 소비의 단위로 생산단위를 규정짓는 농민 경제가 오랫동안 제주지역에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장 발달의 침체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 농민사회에서 시장발달이 침체를 가져온 원인은 도서지역으로서 해수의 장애에 의한 고립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농민들을 둘러싼 중심부의 정책적 결정에 직접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조선 후기 200년 동안 제주도민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던 출륙금지령이 제주인들로 하여금 육지부와 절연된 채로 폐쇄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강요당하게 됨으로 교역의 분야에서 제주인들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제주지역의 상권을 쥐고 섬을 드나들었던 상인들은 대부분 육지부의 보부상들이었다. 그들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붓짐으로 운반하고 마을을 찾아다니며 공급하였다. 시장에서의 물자의 교환은 주로 정기시장인 오일시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정기시장에서의 거래는 생계 필수품의 물물 교환형태였다. 이러한 정기시장에서의 거래도 일제시대부터 활기를 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할 즈음인 일제시대에도 일인들이 상권을 독차지하였으므로 제주인들의 상업활동에의 참여는 지극히 저조하였다. 특히 일인 상인들은 대부분이 전작 농산물들이었던 제주도산 농산물에 대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않

았으므로 자연히 농산물의 상품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인 상인들이 선호하는 일부 수산물에서는 일찍부터 가격이 형성되었고 상품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산물의 상품화는 현금소득의 유일한 근원이 되었으며 이것이 해산물의 채취를 전담하던 제주 여성들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해산물 가격은 잠녀 혹은 해녀로 불리는 당시의 제주 여성들로 하여금 인솔자인 객주 혹은 선주가 제공하는 소형범선을 이용하여 국내외 어장으로의 출가행렬을 이루게 하였다. 오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으로는 농민들 사이의 서로 다른 종류의 잉여농산물과 농기구, 소금, 옷가지, 신발 등 생활필수품에 국한되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잉여물은 현금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생계경제 하의 취약성의 두번째 요인인 제주도의 자원은 크게 나누어 해양자원과 육상자원으로 구분된다. 육상자원은 다시 고도에 따라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그리고 산악지대로 나누어지는데 농민들은 이러한 미시생태계를 이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지니고서 분산된 도서 자원 이용에 생계를 의존해 왔다. 생계전략은 복합적인 생계활동이었으며 생산에의 최대의 과제는 노동력의 한계에 있었다. 노동의 중요성은 빈약한 도서 자원의 특성에 있었다. 분산된 도서자원, 이를테면 해양자원이나 목장지 그리고 농경지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자원도 집약적인 노동력의 투입으로 개별 농가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못했다. 이는 생산물이나 잉여물의 수요가 발생하는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데에 기인한다. 어느 한 자원의 이용에 노동력을 집중하여 특정 물건을 생산하여도 이것이 재화로 환원되거나 교환의 수단으로 유리하게 이용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물자는 가내소비의 목적으로 가내 노동력을 분산하여 생산될 수밖에 없었다. 생계경제 하의 취약성의 구조는 지금까지 언급한 요인들 외에도 사회문화적인 또 하나의 요인도 연관되고 있다. 기본적인 물질생활의 기초가 마을에 토대를 두고 있었으므로 농가 단위로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각종 의례 시, 특히 혼례와 상례 시 과시적 소

비가 이루어졌고 의례를 치른 후 해당 농가는 결국 목돈 마련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토지의 매도가 불가피하였다. 의례를 통한 사회 내의 재화의 재분배는 농민들 사이의 평준화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저생산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해방 후의 사회적 혼란과 제주 농민들이 겪은 참혹한 시련은 바로 농민들의 사회적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력 앞에서도 무력할 뿐만 아니라 정치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이념전에 끼여들어 얻을 것이 없는 농민들은 결국 회생양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V. 농민경제의 변화

1. 경제변화의 사회적 여건

제주지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역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지역개발 정책이었다. 제주도의 지역자원의 특성을 이용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거듭된 지역개발 정책수립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제주경제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지리적 고립으로 인하여 각종 국가개발 정책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제주도 지역은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주민들의 소득은 전국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기, 상수도, 위생시설 등은 제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미비된 상태에 있었으며 도내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도 비포장 일주도로가 유일한 도민들의 교통로였다.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 등 주로 일차산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은 전무한 상태에 있었다(제주도 1993b: 563).

제주도의 부존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외부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

한 것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었던 1962년도부터이다. 이 해를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에 힘입어 도로의 개설 및 기존 도로망의 확장과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용수개발, 동력개발, 항만과 항공시설의 개선 등 사회 기간산업이 탄탄히 구축되었고 이러한 토대 위에 관광개발이 가속도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개입의 결과로 제주지역은 빠른 속도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제주도민은 50년대까지 직면하고 있었던 빈곤과 기아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거듭된 개발로 인해 연륙교통이 단기간 내에 크게 향상되면서 지역 농수산물의 육지부로의 수송이 용이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도내 시장에서 자급자족적 소비를 목적으로 유통되던 제주 특산 농수산물은 육지부의 거대 시장의 수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주 농민들은 이러한 경제기회를 인식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작물의 재배에 주력하게 되었다.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농업 전 부문에 걸쳐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농업인구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생계경제 하인 1960년도의 제주도 농업인구는 총인구 281,720명 중 231,617명으로 전체인구 84%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80년도에는 농가인구가 243,260명으로 전체인구 462,755명의 44%에 지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농업인구는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구의 감소현상은 바로 농민층의 분해를 뜻하며 농민 중의 상당수가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뜻한다. 농업의 변화는 생계농업의 상업화와 전문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가당 경지 면적은 1ha에도 미치지 못하여 육지부에 비해 농업경영의 규모가 여전히 영세한 상태에 있었다.

제주 농민들에 의한 환금작물의 재배는 일제시대에 시작되었다. 일인들은 자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작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주 농민들에게 맥주맥, 목화, 제충국의 재배를 권장하였고 이에 호응한 일부 농민들이 이들 작물을 재배했을 뿐이다(제주도지 1982). 해방 후부터 오십년대까지는 맥주맥, 신서란과 같은 특수 작물의 수

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재배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현금작물의 재배는 농민들의 자의적 의지나 시장수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계작물 경작이라는 전통적인 생산양식에는 어떤 변화도 야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와서 이른바 현금작물(cash crops)의 재배는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바로 육지부의 거대 시장수요에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60년대 이후의 소위 상업적 농업은 시장수요를 의식하여 보다 많은 현금을 얻기 위한 농민들의 전략적인 시도의 결과로 행해졌으므로 농민사회에 혁신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야기시켰다.

생계작물의 현금작물화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제주도의 기후를 이용하여 주로 채소류, 과일 등의 부문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하부지역의 토질에 알맞은 작물들은 과거에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량 재배되었으나 이제는 시장을 겨냥하여 대량으로, 전문적으로 경작되었다. 현금작물로는 제주 농민들이 재배해 오던 당근, 배추, 무, 양배추, 양파, 마늘 등과 과일로는 수박 등이었다. 제주시에서 버스로 이삼십분 걸리는 서부 지역인 북제주군의 애월읍과 한림읍 지역은 양배추, 양파, 마늘과 같은 원예작물 재배 단지로, 동부의 구좌, 성산, 표선 지역은 당근 재배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발달된 교통망의 혜택으로 전국이 하루 생활권으로 바뀌게 되자 일부 농산물의 시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산물의 판로가 트이자, 제주 농민들은 앞을 다투어 각종 원예작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채소들은 도내에서는 물론 멀리 부산이나 서울에까지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농가 소득도 급증하게 되었다.

2. 상업적 농업의 전개

경제발전계획이 시행된 1960년대 초부터 제주도 농촌사회는 외부 경제의 직접적인 침투를 경험하게 되었다. 지역개발을 위한 거대자본이 제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개선되

기 시작하였다. 하부지역간의 교통뿐만 아니라 연륙교통도 원활해지면서 제주 농민들은 육지부 시장 수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로 과거의 생계작물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현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은 경작지의 물리적 여건을 감안하며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일부 현금작물의 재배면적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제주도 농업은 자급자족적 생계농업으로부터 점차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상업적 농업이란 생산자 자신의 생계유지 수단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의식하며 시장소비를 전제로 하여 현금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해 내는 농업의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농업은 흔히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부문과 결합하여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상업적 농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 자급자족적 부문은 소농경제에서 상품생산의 위험부담을 완충해 주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역시 제주지역에서도 초기의 상업적 농업은 전적으로 농업의 생계부문의 보완적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른 공업화의 전략의 결과로 농업부문의 정책적 배려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특히 저곡가 정책과 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은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비교열위의 산업으로 전략하였고 여기에 대응해서 농민들은 점차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는 각종 현금작물 재배로 작물 전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상업적 농업은 외부시장의 수요를 의식하고 생산물의 상품화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경작지의 토지의 속성에 알맞은 작물들을 경작하게 됨으로써 하부지역에 따라 특정 작물의 주산지가 형성되었다. 가령 구좌 지역의 당근재배, 함덕과 신촌지역의 수박, 애월 등지의 양배추재배, 서귀포지역의 감귤재배가 경작물의 하부 지역적 특화의 구체적인 예들이다. 또한 농업에서의 상품생산의 강화로 농민들의 상호관계는 과거의 호혜적인 인적 혹은 물적 교환관계에서 벗어나서 시장을 향해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자들로 변모하였다. 호혜적 교환노동인 수눌음은 임노동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농민들 사

이에는 경지규모의 대소, 토지의 비옥도, 경작지의 위치 등의 요인과 가족노동력, 무엇보다도 고품질의 제품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의 차이에서 일부 농민들이 보다 유리한 상품생산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보다 많은 양의, 그리고 보다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부를 향유하는 계층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동질적인 농민간에도 커다란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였다.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민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취약성의 문제를 감귤과 바나나 재배와 관련된 사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감귤

제주도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작물이 바로 감귤이다. 원래 감귤은 제주에서 자생해 온 아열대 과수로서 한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지역에서만 생산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조선조에는 이 감귤이 지방 특산물의 하나로 진상 공물로 지정되어 진상과정에 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관리들의 착취가 심하였다. 일제시대부터 개량종이 도입되었으나 감귤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감귤 재배는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연륙교통이 개선되어 육지부의 거대시장 수요에 직면하면서 갑자기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밖의 다른 경제작물과 비교해 볼 때 감귤이 지닌 경제적 이점은 감귤나무가 '대학나무'로 불려졌다는 사실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수입개방에 직면하면서 위기에 처한 감귤을 수호하고자 나선 농민들이 감귤은 '제주의 쌀', 혹은 제주인의 '생계작물'로 그리고 감귤산업은 '생명산업'으로 주장하고 있을 만큼 제주 농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물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감귤 재배연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려사> 등 사서에 전해지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고대로부터 감귤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조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귤과 유(柚)는 별공으로 공납케 했는데 태종 8년에는 공부제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 때부터 조정은 감귤재배를 권장해서 제주도내 각 지방마다 과원을 설

치하여 관노비로 하여금 재배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특히 중종 2년(1526년)에 이수동 목사가 진현을 목적으로 오변방호소에 과원을 설치하여 집단적으로 감귤을 재배, 관리하도록 하였으므로 감귤재배는 도전역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후 효종때에 이르러 과원이 더욱 확장되어 제주목에 22개소, 정의현에 7개소, 대정현에 6개소에 조성되었다. 제주도에는 여러 종류의 감귤이 자생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사라지고 몇 종류의 재래종 귤이 남아 있어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확인되는 재래종 감귤은 크게 나누어 보면 청귤류, 홍귤류, 감귤류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우선 청귤류에 속하는 품종은 청귤, 둥자귤, 자귤 등이며 홍귤류에는 병귤, 유자, 산귤, 소귤, 당유자 등이 있고 감귤류에 속하는 것들은 감자, 금귤, 석금귤, 당감귤 등을 들 수 있다. 이 귤들은 당시 제주에서만 재배되었기 때문에 진귀한 선과라 여겨졌고 진상될 감귤은 종류별로 지방 관리가 나무에 달린 감귤의 수를 세어 두었다가 가을에 그 개수만큼 공출해 갔다. 수확되기까지 나무에 달린 귤은 벌레가 먹어 썩거나 비바람으로 떨어졌을 때도 떨어진 수만큼 나무 주인이 배상해야 했으므로 재배를 꺼리게 되었다. 감귤나무를 가꾸던 농민들은 관리들의 가혹한 공출에 시달리다 못해 몰래 나무 뿌리에 바닷물을 부어 말려 죽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종의 자생감귤은 멸종되었다. 감귤 진상은 고종 때 폐지되었으므로 감귤원은 폐원되고 일반 농경지로 바뀌었다. 그 후 일제치하에 일본인들이 서귀포 일부에서 개량귤 묘목을 자국에서 도입하여 재배하기까지 도내에서는 제수용품으로 소량 재배되어 왔을 뿐이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개량감귤인 은주는 1907년에 처음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은주밀감 농원이 전문적으로 조성된 것은 1913년부터로 알려졌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기후가 온화한 서귀포지역이 감귤재배 최적지로 판명되면서 재배면적이 점차로 확대되어 1936년에는 5.5ha에 이르렀고 생산량은 30t에 달하였다. 이 때에는 품종도 다양해져 은주밀감, 네블오렌지, 하귤, 보래감, 문단 및 금감자 등의 묘목이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밀감은 주로 도내

에서 소비되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본으로부터 고품질의 감귤이 수입되고 있어서 저품질의 제주 감귤은 가격면에서 상품가치를 지니지 못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식산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가 농민들에게 감귤묘목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재배를 기피하였는데 이는 당시 농가가 식량생산에 급급한 나머지 수요가 한정된 감귤재배에 전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찍이 1910년대에 시작된 감귤재배는 30여년이 지났으나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해방과 동시에 일본인이 경영하던 감귤원을 제주인들이 인수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나 재배기술의 미흡과 비료 및 농약 등 자재의 부족으로 감귤원은 나날이 축소되었다. 특히 4·3사건과 6·25가 발발하여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대부분의 마을들이 소개됨으로써 자연과수원이나 감귤나무는 방치될 수밖에 없어서 그나마 남아 있던 감귤원은 극도로 황폐해지게 되었다. 해방 후 혼란기에서 벗어나 사회가 안정을 회복하면서 감귤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농가는 재배의욕을 회복하고 해마다 일부농가가 감귤재배에 참여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53년에 재배면적이 17ha에 불과했으나 1961년에는 230ha로 확대되었으며 생산량도 388t으로 증가하였다. 재배기술도 점차 향상되어 시비는 물론 정지전정이 실시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접목묘의 생산기술이 도입되었고 묘목수요가 확대되면서 1954년부터 일본산 묘목이 다시 수입되었다.

1962년도에는 감귤협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제주도 농업진흥원이 감귤 시험재배 사업을 착수하면서 각종 해충 퇴치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생산되는 감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공급되었는데 소비지의 상인들이 산지인 제주로 내려와 직접 구매해 갔다. 포장단위는 사과 포장용 목상자에 온주는 7관, 하귤은 6관을 한 상자로 하였으며 가격은 관당 백미 5승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되었다. 이러한 가격은 감귤의 희소성으로 인한 파격적인 가격이었어서 감귤나무 한그루면 자녀 한 사람이 대학을 마칠 수가 있다는 뜻에서 ‘대학

나무'로 불려졌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제주 지역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기간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도로, 항만, 공항이 정비되어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시설이 향상되면서 감귤의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소량으로 생산되던 감귤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고가로 매매됨으로써 농가마다 고소득 작물인 감귤재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생계경제 하에 호구지책의 마련이 어려웠던 당시, 묘목의 식재 후 수확까지 무려 5-6년을 더 기다려야 했으므로 사실상 농민들은 그들의 재배욕구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으며 사실상 감귤재배에 투자할 여력도 없었다. 이에 따라 1962년에 제주도는 감귤주산지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감귤원 조성을 위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으로 감귤재배를 장려하였다.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감귤은 고가로 매매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농작물과 비교될 수 없는 고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작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방풍림식재 방식이 알려지고 인공으로 방풍이 가능해지면서 재배지역도 천혜적으로 방풍이 되던 서귀포 지역을 벗어나 종전에 감귤재배가 불가능한 곳으로 여겨졌던 중산간지대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겨울의 강한 북서풍이 감귤나무에 치명적이어서 농민들 사이에 서귀포지역 이외의 타지역에서의 감귤재배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감귤재배에 있어서 마을마다 혹은 지역에 따라 재배 시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시적 환경 요인과 경작에 따른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작시기는 우선 기온과 풍속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라산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서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해안지대와 중산간지대에서의 차이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바람이 강한 북서부지역 이를테면 한림, 애월, 한경지구의 해안지대에서는 해풍의 영향으로 해안지대에서의 감귤재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통점으로는 각 마을마다 모험심이 강한 선구적인 경작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시험재배를 통해서 감귤재배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이것이 확인된 후 당시 혈값

의 박토를 매입하고 감귤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외부의 대자본가도 혈값의 토지를 매입하고 대형농장을 조성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을 때에 토박이 소농들이 뒤늦게 감귤원 조성에 뛰어들었다(김준희 1984). 1961년에 재배면적은 230ha, 생산량은 388톤에 이르렀고 10년후인 1971년에는 재배면적은 5,840.3ha, 생산량은 5,972톤으로 엄청난 규모로 증가해 왔다.

감귤재배가 마을의 경제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과거의 양전이 오히려 박토의 지가보다 낮아지게 되고 불모지로 여겨지던 곳이 황금열매를 맺는 과수원으로 변모되었다. 토지의 효용도가 달라지면서 과거에 양전인 해변가의 토지는 해수의 영향으로 과수재배가 불가능하여 보통전으로 분류되었으며 과거 해발 50m에서 100m에 이르는 지대의 보통전과 100m에서 150m 사이의 열등전이 모두 가장 효용도가 큰 우등전으로 분류되어 감귤재배는 사실상 우등전의 면적을 확대시켜 기존의 토지의 효용도를 극대화하게 되었다(김준희 1984, 오석민 1986). 무엇보다도 경작지로서는 불모지나 다름없이 여겨지던 해발 200m의 고지대의 토지도 보통전으로 이용되고 있음은 달라진 토지 이용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과수원 조성 초기에 이루어진 토지 소유의 변동은 마을내의 부의 소재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시켰다. 감귤재배 초기인 60년대 초에 과감하게 양전을 매도하고 목장지나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마모른 밭, 뜰밭과 같은 박토들을 대량 매입함으로써 토지용도의 변화를 예측한 일부 농민들은 새로운 지주로 떠오르는가 하면 기존 토지 가격에 좀 더 얹어 주는 푼돈에 혹한 나머지 목장지나 산림지를 혈값에 매도함으로써 감귤재배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해진 농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의 지가라 해야 1000평의 숙전이 소 한마리 값에 매매될 정도였으므로(오석민 1986) 목장지의 지가는 땅값이라고 할 수 없었다. 토지의 변동은 특히 초지나 산림지의 박토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중산간지역의 마을이나 중산간을 끼고 있는 해안지대의 마을들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산간지대에는 광활한 목장지

가 많았는데 특히 남군지역에서는 이러한 목장지대가 대부분 과수원으로 개간될 수 있는 지대여서 일찍부터 토지의 투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외지인들의 토지투매 현상도 농촌 마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토지가 형성되기 전에 주민들이 버리다시피 팔아 버리는 토지를 평당 몇십원에서부터 이삼백원의 가격으로 몇 만평 혹은 십여만평을 구입하였다(김준희 1984). 생계경제 하에 이렇게 토지 값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개별 농가는 크고 작은 일들에 직면하여 목돈이 필요하였으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순환의 수단으로 토지를 매도해야 했으므로 마을 내에는 항상 잉여의 토지가 유통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 있다. 특히 감귤재배 초기에는 과수원 조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토산리의 경우를 보면 감귤재배가 시작되면서 마을 경내의 토지 중 43%가 외지인들 소유주의 것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나머지의 마을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귤원 조성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토지가는 급등하게 되었다.

세월이 경과하면서 감귤의 위기는 생산자들의 과열된 재배욕에 의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귀포시 일부 지역에 국한되던 감귤재배는 고소득 환금작물로 부각되면서 침체되는 생계작물의 대체 작물로 선택되어 재배면적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도 전역에 걸쳐 재배지가 확산되었다. 재배면적의 증가는 꾸준한 소득의 증가와 연결되었고 농민들 사이에 편차는 있을지라도 감귤은 농민들로 하여금 생계경제 하의 절대빈곤 상태를 벗어나게 하였다. 또한 일부 농가는 자본을 축적하여 타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감귤은 제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급성장해 오던 제주의 감귤산업은 1975년을 고비로 한차례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재배 면적의 확대와 재배기술의 축적, 단위 생산량의 증대로 도내 생산총량이 크게 증가하였

고 75년의 경우 기상 호조와 해거리 풍작까지 겹쳐 전년 생산량의 약 2.7배에 이르는 8만여톤의 감귤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생산량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감귤의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감귤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예상외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는 유통처리 시설 및 처리능력을 한계에 이르게 하였고 유통 마진율만을 높여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과 더불어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다.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유통처리 기능을 꾸준히 강화시켜 왔으나 해마다 감귤의 생산과잉 현상은 계속되었다. 실질적으로 농가 판매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거듭해 오면서도 재배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한계에 이른 제주 농업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가격이 하락되더라도 다른 작물에 비해 감귤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배기술의 축적과 과수목 성숙 등으로 단위당 생산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70년대 후반 이후 감귤산업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소득 탄력성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특히 육지부에서 사과와 배, 감 등의 과일들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감귤 수요를 잠식하여 감귤시세의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감귤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더욱 심화되어 급기야 감귤산업은 침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서귀포와 남군지역에서 감귤재배에 일찍 뛰어들어 자본을 축적한 일부 농가는 감귤산업의 한계에 이른 것을 의식하고 대체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후르츠 등의 고소득 아열대 작물과 양란, 백합, 거베라 등 화훼를 재배하며 거액의 시설비가 요구되는 시설원예로 전환하였다.

감귤재배 농가는 유통구조의 개선,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의 향상, 극조생과 조생 그리고 만감의 재배를 확대함으로써 수확시기의 조절,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적정생산의 유도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풍작을 이루는 해에는 여지없이 감귤과동을 되풀이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일부 농가는 극

조생 감귤과 만감 재배를 증가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려는 시도와 감귤의 당도를 높이려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된 일부 상인들과 농민들이 설익은 감귤을 카바이트로 착색하여 출하함으로써 제주산 감귤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서 생산자 자신이 감귤산업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귤산업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제반 요인들 외에도 수입개방의 압력에 직면해서 외국산 감귤과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2) 바나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앞서 언급했듯이 감귤은 재배 면적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다. 결국 감귤가가 계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급기야 농민들은 감귤산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타 환금작물은 농산물 수입정책에 의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됨으로 인해 대부분의 작물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제주도 지역농업의 토대를 이루어 온 감귤과 그밖의 환금작물의 쇠퇴는 농가소득에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대체작물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 농민들의 관심을 끌게 된 작물들이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와 화훼 등이다. 이 중에서도 고소득 작물인 바나나가 가장 유력한 대체작물로 농민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되었는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바나나 재배과정에서 드러난 제주 농민들의 부를 이룰 꿈의 실현의 시도와 좌절은 오늘날 농민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한국에서의 바나나 시험재배는 1961년 경상도 광도면 죽림리 홀리마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서는 1966년경부터 파인애플과 함께 바나나가 시험재배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소수의 사람들이 이들 작물의 재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시도된 재배는 1973년도에 이루어졌다. 서귀포 토평동의 녹장원의 농장주가 그 해에 50평의 토지에다 바나나 재배를 시험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한 후 75년부터 본격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78년부터 바나나를 수확하면서 상품가치를 확인하여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알려지자 일반농가도 바나나 재배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무엇보다도 자금회전이 빠르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바나나 재배를 선호하게 되었다. 재배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재배농가는 해마다 늘었다. 많은 농가가 바나나 재배에 참여하게 되자 생산농가들은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도모하고 보다 유리한 바나나 생산방식을 터득하기 위해 농민들 스스로 1982년(제주바나나협회)과 1986년(한라바나나협회) 바나나 협회를 구성하였다. 이들 협회가 창설되면서 재배면적이 더욱 늘어 84년 2만5천여평에 지나지 않던 재배면적은 85년말에 25만평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86년도엔 100% 증가하여 50만여평에 이르렀다. 재배 농가도 84년도에 250여 농가였던 것이 85년도에는 5백여 농가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 사람이 두 곳이나 세곳의 바나나 농장을 가진 경우도 많으므로 농장 수는 700여개소에 달했다. 바나나 재배는 난방을 위한 연료비가 덜 드는 해안 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 점차 산간 2백고지의 마을에까지 확산되었다.

그런데 바나나 재배에는 평당 7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시설비와 난방비가 소요되는 데다 정부에서 수입개방될 품목으로 고시하고 있어 재배 초기부터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서 일반 농민들에게는 투기농업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농정이 소위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도를 농민들은 철저히 불신하고 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농사지으면 망하고, 지시를 어기고 농사지어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농민들의 신조였다. 그러므로 농정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먼저 재배에 손을 댈 농가는 재배 후 2년사이에 투자비용을 뽑고 매년 막대한 순익을 챙길 수 있었다. 더욱이 감귤의 과잉재배로 생산량이

격증하여 가격의 폭락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감귤의 작목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고 있던 당시의 사정으로는 바나나 재배농가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제주바나나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77년에는 단 1가구의 농가만이 참여하여 재배면적은 150평에 지나지 않았으나 80년도에 들어서면서 재배 농가와 식부면적이 해마다 늘어났다. 묘목만 식재하면 다음 해에 수확을 볼 수 있다는 추가의 이점으로 바나나야말로 바로 제주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던 ‘꿈의 작물’로 여겨졌다. 식부면적의 증가를 보면 83년(84년수확) 9천6백평, 84년 7만5천평, 85년 25만평, 86년 50만평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연도별 재배농가수와 생산량을 보면, 83년도(82년 식재)에 15가구가 10톤을, 84년도에는 60가구가 50톤을, 85년도에 165가구가 400톤, 86년도에 240여 가구가 2천톤을 생산해 냈으며 90년도의 총 재배면적은 441정보, 생산량은 21,770톤에 달하였다. 지역별 재배현황을 보면, 86년도에 제주시가 0.5ha, 서귀포시가 35ha, 남군이 33ha로서 바나나재배에 관한 한 서귀포시와 남원읍이 주산지가 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바나나 시세가 호조를 보이자 비농가나 기업에서도 바나나 재배에 뛰어들었다. 86년 10여명이 참여하여 모두 32,900평에 바나나를 재배하였다. 예를 들면 문씨가 토산, 하효 등에 13,500평을, 태평양화학과 부광약품에서도 각각 4천여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관광개발공사, 남영나이론, 푸른농원, 재일교포인 오씨, 임씨 등도 1천평 이상씩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86년도까지는 바나나 재배자의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농민이지만, 경작규모에서는 기업과 재일교포, 외지인들이 대단위로 재배를 착수하여 보다 넓은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재배과정에서도 재일교포들은 보통 시설비를 전부 대주고 관리를 맡겨 거기서 얻는 수익의 반을 자기 몫으로 받는 계약재배를 일찍 시도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기 바나나 재배 농가들이 일단은 부농이라는 점이다. 바나나재배는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비로 평당 7만원이 소요되어 1,000평의 하우스를 건축하는데 무려 7,000만원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농가소득으로는 비교적 큰

자급인 시설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재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 농가들은 바나나 재배 이전에 주로 밀감을 재배해서 자본을 축적한 후 감귤농사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한창 수확기에 있는 감귤나무를 베어 내고 그 자리에 하우스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토지를 임대해서 바나나를 재배하였다. 재배조건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연평균 강우량이 1500mm이고 한창 성장기인 6, 7, 8월에는 비가 많이 와서 유리한 요인이 되었다. 반면 가을부터 봄까지 아열대 식물인 바나나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가온 상태에서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의 투입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무가온 상태에서 재배하여 연료비가 거의 안 드는 대만이나 필리핀의 바나나 생산농가에 비하면 생산비의 투입이 많은 제주도 농민들이 가격경쟁에서 절대 불리하지만 육지부의 재배농가에 비하면 연료 소모가 적어 오히려 제주농민들이 비교우위의 입장에 있었다. 바나나가 수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산 바나나는 국내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초기 경작자 중에 30%에 달하는 재배자들이 경작 미숙으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관리에 있어서는 환풍기와 난방기 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예고 없이 불시에 정전이 되어 버리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재배농가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여름에는 고온장애, 겨울에는 동해(凍害)를 입을 위험에 항상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겨울철에 한 시간 이상 정전될 경우 1년의 바나나 농사는 수확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태풍이나 약제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토양선충도 종종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거액의 시설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빈농들이 재배에 참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 재배하여 평년작만 유지하면 3년 내에 자본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해 가면서 바나나 재배에 많은 농가들이 뛰어들었다.

바나나의 재배붐이 일어나면서 바나나재배와 연관된 업체가 누린 단기간 동안의 호황은 지역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

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바나나 재배 혜택은 바나나하우스 시설에서부터 바나나 출하까지의 전과정과 연관된 여러 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선 하우스를 건축할 토지의 정리작업을 전담하는 중장비 업체로부터 시작하여, 퇴비장사, 골조(파이프) 제작업자, 하우스시설 시공업자, 비닐장사, 관수용 PVC파이프 및 난방기 제작업자, 환풍기 제작업자, 과풍망 제작업자, 보온용 단열재 제작업자, 시비 전문업자 등과 많은 자재를 운송하기 위한 육상, 해상 운송업체, 그리고 잠정적인 실업률 구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배출구가 없어 낭비되기 쉬운 비축자금이 생산적인 면에 투입되어 자본화되었던 점이다. 서귀포 지역을 비롯한 산남지역 전역에 '밀감수입'으로 소비시장에 쏟아지는 돈의 혜택을 누리며 호황을 누리던 각종 유흥업소들도 바나나 돈을 만지면서 그 호황이 극에 달하였다. 겨울 한 철 흥청거리는 밀감 돈에 비해 '바나나 돈'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들 업소로 쏟아지고 있었다. 80년대 중반기에 서귀포에서 사람들의 대화는 바나나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할 정도로, 바나나재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바나나는 소문난 그대로 '꿈의 환금작물'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배의 이면에는 엄청난 투자와 그에 상응하는 위험부담, 비록 고소득 작물이긴 하지만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현격한 가격 차이, 고온장애, 동해, 약제의 남용 혹은 오용으로 인한 작물 피해, 토양선충에 의한 피해,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 유통의 전근대화 등 재배자들을 곤궁에 빠지게 하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이 도사려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가격차이를 보이는 외국산 바나나 수입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의 바나나 재배는 줄타기의 곡예와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수입개방과 더불어 전체 바나나 재배 농가가 완전 폐농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입증된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제주 농업이 직면하게 된 취약성의 문제를 다루고 농민경제의 미래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VI. 문제와 전망

1. 수입개방과 농민경제의 취약성

정부 개입에 의한 지역개발의 결과로 농민들은 생계농산물 생산에서 시장수요에 맞춰 각종 환금작물과 고소득 아열대 작물 등을 재배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은 한편으로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서지역으로서의 자연환경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시장과의 거리와 수송문제 등의 불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며 국내시장에 감귤과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의 아열대 작물과 당근, 양배추 등 채소류 등을 국내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한동안 제주 농민들은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 농업은 단기간 내에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제주도 지역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배면적의 확대에 의한 감귤 생산량의 급격한 양적 증대는 바로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고 감귤경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감귤생산의 소득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감귤농업은 70년대의 호황기를 거쳐 80년대 중반기부터 침체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감귤과 더불어 농가의 경제작물로 재배되던 유채, 고구마, 참깨, 콩 등의 작물들도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점차 재배면적이 감소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들 작물의 재배는 전면적인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이들 경제작물 대신에 양배추, 당근, 파, 양파 등 채소류의 재배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배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풍작과 흉작에 따라 혹은 작황에 상관없이 시장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파동에 휩쓸리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귤의 침체와 더불어 80년대에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으며 재배되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시설원예는 경영규모가 크고 다액의 자본이 투자

되었으나 재배경력 5년 이하의 농가가 70%에 달하고 있던 1991년에 끊임없이 거론되던 전면 수입개방화의 조치가 마침내 정부에 의해 단행되었다. 그래서 뒤늦게 이들 작물재배에 뛰어든 많은 농가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도 전에 도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산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수입이 자유화됨으로 생산기반이 막 정착되려던 즈음에 시설원에 농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바나나 농장은 폐기되었다. 지난 30년 동안에 이루어진 제주도 농업은 다른 어떤 분야에서보다도 작목별 생산구조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재배면적은 빠르게 감소한 반면 감귤과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업구조의 변동의 이면에는 농업의 침체현상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86년도에 농업소득은 관광산업의 소득에 의해 추월 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농업내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여러가지 침체의 요인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제주도내 산업구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제주도 지역경제 전반이 국내외의 경제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산 농산물 수입개방에 직면하여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던 제주산 농산물은 외국산 고품질, 저가격의 농산물과 경쟁하게 되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던 농민경제는 사실상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농민들에게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의 여파는 심각한 것이다. 특히 각종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 온 제주 농민들은 전국의 어느 지방보다도 농산물 수입개방의 피해를 극심하게 입게 되었다. 농촌의 사정을 보면, 해마다 줄어드는 농업인구, 이에 따른 노년층 인력의 증가, 농가 경지면적의 영세성, 농사짓는 자와는 별개로 이익 보는 자들이 따로 존재하는 조잡한 유통구조 등 어느 것 하나도 제주 농촌을 밝게 할 전망을 던져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농업소득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은 1990년도 제주도내 농가호수는 모두 42,000여 세대로, 8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 총생산 1조3,942억 중 농업 소득은 4,

099억원으로 전체소득의 29.4%를 점유하고 있음에서 입증된다. 특히 89년의 경우 연간 관광수입이 3,441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년보다 1,000억원이 증가하면서 농업수입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수입이 대부분 타지방의 기업체에 속한 관광업체의 수입으로써 외부지역으로 환류되는 자금이고 농업소득은 도내 지역경제에 유통되는 자금임을 감안할 때 제주 지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구면에서도 농촌인구가 85년 이후 해마다 4,000여명씩 감소하고 있으나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지난 85년 18,300명에서 89년말에는 21,1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청장년층은 5년 사이 66,500명에서 60,100명으로 6,000명이나 감소하여 해마다 각종 농산물의 수확철에는 일손이 모자라 높은 품삯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영농비 부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감귤인 경우 지난 60년대 이후 본격 재배하면서 지난 80년에 19,900농가가 14,000ha의 재배면적에서 18만7,000톤을 생산, 545억의 농가 소득을 올렸던 것이 89년에는 25,500농가가 19,300ha에서 74만여 톤을 생산, 20,02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급성장률 기록했다. 이에 따라 89년 전체 농산물 소득 40,099억원 가운데 50%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이 제주도의 생존농업임이 확실히 입증되었다. 아열대과수의 경우 한때 바나나, 파인애플, 양다래 등이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농가가 경작에 참여하였다. 90년도 바나나 재배농가 1,600농가가 441ha에서 21,770t을 생산해 5,440억원의 농가 조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수입개방 직전 도내산 바나나는 kg당 2,000원대의 판매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필리핀 산은 160원, 대만산은 400원 선에 가격이 형성돼 가격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바나나 생산농가는 90년도 당시만 해도 적절한 대체작물을 선정하지 못하여 속수무책인 채로 수입개방을 맞고 있었다. 그러나 파인애플과 양다래는 최대한의 생산비 절감과 유통체계를 개선하면 비교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재배농가들은 도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도내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식량작물이 처한 사정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크게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작물의 재배면적은 32,000ha에 이르고 있어 과수 재배면적보다 14,000ha가 넘는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수입은 오히려 과수작물의 25% 선인 연간 820억 안팎에 머물고 있다. 91년부터 콩, 유채종실이 수입자유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각종 식용유에 대한 문호까지 개방되어 국내 유량업체들은 89년산 콩마저 인수하지 않는 상태이며 두류 고시가격 역시 4년째 동결되고 있어 재배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팎의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제주 농업은 90년대 들어와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이란 타결이 가시화 되면서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UR파고는 93년도 협상타결로 농산물에 대한 완전한 수입개방과 이보다 한단계 높은 농업 관련 각종 보조금까지 중단하도록 조율되고 있다.

수입개방에 따른 연도별 수입품목이 1989년 4월 8일 예시된 후 1년이 지난 1990년도의 농산물 수입개방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농산물의 미래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방화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제주의 경우도 이에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우선 계절관세로 수입되는 각종 외국산 농산물로 바나나의 경우 약 1,500농가에 달하는 재배농가와 25,000가구에 달하는 감귤재배농가, 그리고 12,000농가의 파인애플 재배농가의 염려와 우려가 가장 컸다. 왜냐하면 이들 작물은 제주도 농가에 가장 높은 소득을 보장해 왔으나 유사한 해외 농산물과의 가격차가 심하여 수입이 감행될 경우 당장 폐농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취약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위 고소득 작물인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의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섰다. 이듬해인 1991년부터 바나나, 파인애플, 멜론 등이 전면 개방되면서 이들 작물이 수입되기 시작하였고 수입개방이 가져온 재배 농가에의 직접

적인 피해는 예측했던 바 그대로였다. 제주농민들의 주력 작물인, 한해 2,000억원의 조수익을 보장하고 있던 감귤 재배에서도 수입개방으로부터 농가가 겪을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개방에 가장 취약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가온 시설재배로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데다 동계철 동안 기름으로 가온하여 일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생산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생산비를 감안할 경우 kg당 제주도산 바나나의 최저 생산비는 1,949원이고 파인애플은 767원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필리핀산 수입바나나의 가격이 kg당 102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산 바나나 가격은 무려 14배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 수입되는 바나나 가격이 455원, 파인애플 가격이 526원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수입개방과 더불어 바나나와 파인애플 재배는 폐농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주장이 실감되지 않을 수 없다.

감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60년대 초부터 많은 농가가 감귤원을 조성한 결과 감귤생산에 종사하는 농가는 25,000농가에 달하고 있으며 경작면적은 19,000여ha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감귤원 면적에서 농민들은 해마다 50만에서 70만에 이르는 감귤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의 결과로 연평균 감귤 조수익은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조수익의 규모로 미루어 보아 감귤은 도내 농가의 주 소득원을 이루는 작물로 자리를 굳혀 왔으므로 감귤 재배의 침체는 제주도민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면 수입개방이 되기 전에도 감귤 농축액이 쿼터제로 들어옴으로써 과잉생산으로 처리난에 직면하고 있는 제주 감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면 수입될 경우 제주 감귤생산이 처하게 될 상황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측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감귤은 사과와 배 등의 수급 동향에 영향을 받으며 또는 도내 해절이 주기에 따른 감귤생산의 풍작과 흉작과 맞물려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1990년도 상반기의 외국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요 농산물을 기준으로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량

이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도내 주요농산물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8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도내 농업이 수입개방의 직접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도내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농산물의 수입액은 90년 6월말까지 모두 3억7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억9천9백85만달러에 비해 8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바나나 수입 액수가 1억4천4백80만달러로 가장 많고 콩 1억7천만 달러, 대두박 6천4백만달러, 오렌지 농축액 3천만달러, 키위 38만달러, 파인애플 28만달러 그리고 유채유, 대두유, 당면, 파인애플 통조림 등 가공농산물이 2천2백83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1991년 벽두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의 강풍은 보다 거세게 몰아쳐 와 무방비 상태의 제주농업을 무차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제주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바나나를 필두로 해서 파인애플, 키위, 오렌지 농축액, 유채유, 콩, 대두박, 전분 등 10여개의 품목에 이르렀고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도내 최대의 열대작물로 한해 600억원 이상의 조수익을 안겨 주던 바나나의 재배가 갑자기 초토화될 단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의 봄을 상징해 온 유채의 폐농위기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파고의 위력을 실감케 하였다.

1991년 1월 전면 수입개방 이후 7월말까지 제주 바나나에 대한 용단 폭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25만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바나나가 수입되었다. 외국산 바나나는 상륙하자마자 전년도 kg당 최소 3,500원대의 농가수취가를 기록하던 바나나 값을 순식간에 400원 선으로 떨어뜨려 재배농민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7월 이후 무더위로 인한 부패위험으로 수입이 일시 중단되어 kg당 가격이 겨우 1000원대로 회복되었으나 이러한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당해 연말까지 총 수입물량이 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정되었으므로 재배농민들은 바나나 재배가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였고 도내 최대 바나나 주산지였던 서귀포시 법환동과 토산리에서의 바나나 재배면적은 같은 해에 절반으로 줄었고 남은 농가 역시 열려

있는 바나나를 처분하는 가을 수확으로 모든 바나나 농사가 끝을 맺게 되었다.

파인애플 사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1991년도 상반기 동안 280만 달러에 이르는 물량이 수입되면서 kg당 1200원 선의 농가수취가가 300원선까지 떨어진 이후 파인애플 재배 농가도 바나나 농가와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수입개방의 여파로 제주인들 대다수에게 가장 절실하게 아픔을 느끼게 한 작물이 바로 유채이다. 값싼 외국산 유채박이 수입되면서 유채박의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은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게 되어 제주 들판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소중한 관광자원이었던 유채꽃은 관광객의 시선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원래 당국에서는 유채를 전략작목의 하나로 지정하여 가격 고시제에 의한 수매를 추진하고, 쌀과 보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19% 정도의 수매가를 인상함으로써 유채재배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작 수입 자유화하면서 정부는 계약재배를 자율재배로 전환하고 수매가를 수입전 가격으로 동결한데 이어 유채중산 자금마저 1992년부터 제주도로 떠넘김으로 재배농가들을 낙담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유채는 지난 81년 재배면적 9,100여ha에 16,000여톤에 이르던 생산량이 1991년도에는 4,500여ha에 생산량은 7,000톤으로 재배면적에서나 생산량에서도 모두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예정된 수입개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농민들은 자신의 농토 위에 무엇을 경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다. 바나나, 파인애플 등 아열대 과일류와 유채, 콩, 전분 등의 환금작물이 전면적으로 수입개방 되었을 때 농정 당국이나 연구기관은 이것이 도내 농업전반에 가져올 충격파를 예견하고 또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제주 농업체계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영농의 진로를 제시했어야 했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장경쟁시대의 생계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이 수입개방의 압력에 떨고 있는데 감귤을 살리려는 대책의 절실한 상황

이나 제기되는 주장은 많으나 실행되는 일들이 없어 바나나의 전례가 감귤에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제주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을 뿐이다.

2. 농민경제의 전망

1993년 12월 17일 마침내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내시장을 세계시장에 개방해야 하는 개방화 시대를 맞게 되었다. 개방화 시대에 제주 농민경제를 전망하고 있는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제주의 경제가 현재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감귤산업은 붕괴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제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감귤을 비롯한 도내 주요 환금작물이 수입개방으로 입게 되는 타격은 우선 농산물값 하락으로 그 동안 국내시장에서 비교우위의 유리한 위치를 점유해 온 제주산 농산물이 시장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산기반의 붕괴가 야기되고 농가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산업계의 위축, 이농현상의 가속화 등으로 최악의 경우 지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빠르게 현실로 다가왔고 UR 타결의 높은 파고가 빠른 속도로 제주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수입개방 압력으로 빗장이 풀린 채로 밀려들어오는 각종 농수산물 은 제주산 농산물을 밀어내고 있어서 개방의 압력을 제주경제가 어느 정도 견디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영역이다. 한때 전국에서 상위권에 머물던 도내 일인당 총생산액도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밀려나 있음이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1년 기준 제주지역의 일인당 GRP는 409만원으로 강원, 충남, 대구보다는 높지만 전국평균 GRP 496만원의 83.3%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지난 61년도 일인당 도민소득이 9만원이었던 것이 현재의 소득으로 향상된 것은 놀라운 성장

을 이룬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성장의 토대가 된 것은 바로 감귤소득과 관광산업의 성장이었다. 이렇게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제주지역 경제가 낙후성을 띠게 된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지역의 성장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되고 있다(제민일보 94. 1. 1.).

부분적인 농산물개방의 여파로 휘청거리면서도 1992년도 도내 농업 소득은 5,878억원으로 도내 총생산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감귤소득은 2,659억원으로 전체 농업소득의 45%와 도내 총생산액의 11.7%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농업 총소득 중 쌀의 소득이 43.7%에 이르고 있어 쌀의 개방시 국내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만큼이나 제주도민들에게는 심각한 것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앞두고 “제주의 생명산업 감귤을 수호하자”고 외치며 진행된 범도민 쉼기대회에서 보여진 제주인들의 감귤수호의 확고한 의지는 바로 이러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귤 외에 모든 소득작물의 개방시 제주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도내 소득작물이라 할지라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물은 한 품목도 없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다. 제주산 참깨, 녹두, 고사리 등의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처져 벼랑에 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진다. 특히 같은 작물의 중국산 헐값 공세는 이들 농산물의 국내시장 기반을 완전히 흔들며 놓고 있다. 품질경쟁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격 차가 너무 커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농산물이 외면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참깨의 경우 제주산은 한말에 대개 1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으로는 한말에 4만원 하는 중국산 참깨와는 도저히 가격경쟁이 될 수가 없다. 팔과 녹두의 경우에도 중국산이 각각 15,000원-35,000원으로 제주산에 비해 1만원 가량 싸다. 중국산 고사리도 4kg에 5천원으로 제주산의 15,000원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양상은 수산물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에서 들여온 조기는 3.6kg짜리 1단에 3만원 하는 제주산 조기가의 5분의 1 수준인 6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인들의 생계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이 UR협상의 최종적인 타결로 인하여 내년부터 개방의 파고에 휩쓸리게 되었다. UR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1989년까지만 해도 수입절대 불가의 품목인 소위 NTC품목 중의 하나에 어렵게 끼여들면서 감귤의 국제경제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 감귤은 논의의 여지도 없이 개방 품목에 포함되어 해외시장으로 그 동안 굳게 닫아 온 빗장을 풀어야만 하게 되었다. 92년도에 바나나가 수입되면서 제주농민들이 바나나 재배의 폐농을 선언해야 했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감귤 폐농의 악몽에 시달려야 할 입장에 있다. 개방의 시작과 더불어 감귤산업의 규모는 30%정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경쟁력이 보다 취약한 양파, 마늘, 감자 등 발작물의 수입개방 타격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91년도 도내경제의 농어업비중 35.9%는 개방화에 접어들어 그 비중이 2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 비중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농인구들이 3차산업으로 흡수된다고 해도 감귤산업의 축소는 농업비중을 떨어뜨리는 외에도 연관산업인 가공업이나 운송, 보관을 전담하는 업체와 하역업체 그리고 유통부문 등 2차, 3차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따라서 감귤산업이 위축될 경우 도내 전 산업에 도미노 현상을 유발하여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하게 되리라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닐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감귤과 관광산업을 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주도민들 사이에 비등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 국내 경기의 침체로 3년 동안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개방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 제주경제는 한마다로 위기의 상황 맞고 있는 셈이다.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걸친 침체는 도내 산업의 불균형의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 가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불균형의 상태에 있는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방이라는 강한 외풍에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허약한 체질을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1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농어업 등 1차산업이 35.9%, 2차산업이 5.6%, 그리고 3차산업이 58.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85년도에 비해 농림어업부문이 5.2% 감소한 반면 관광업과 건설 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1%와 4.2%씩 각각 증가함으로써 1차 산업비중은 매년 1%정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해 볼 때 제주도의 1차산업의 비중은 무려 4배나 높는데 비해 2차산업은 오히려 5배나 낮고 3차산업만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1인당 GRP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이유는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2차산업의 성장기반이 취약한데 연유하고 있다. 사실상 제주 경제의 기반은 농업과 관광산업이므로 제조업의 취약한 기반은 제주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의 제주 경제의 성장은 내부요인보다는 오히려 중앙경제의 성장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제주 경제의 성장은 지역 자체의 생산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기 보다는 외부시장의 변덕에 시달려야 하고 육지부 사람들의 휴가계획에 좌우되는 외부 시장에서의 종속을 심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주경제는 국내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개방화시대에 직면하면서 거대한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우선은 눈앞에 다가온 감귤개방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중장기간에 걸친 도내경제의 체질개선을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주경제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그 동안 관광산업에서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서비스업의 속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관광지로서의 제주도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관광시설들이 외지 자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관광객이 뿌리고 간 소위 관광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조적인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제주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우선 제주경제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산업인 농업과 3차산업인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안도 그 구상만큼이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즉 실효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농수산물의 가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지역단위의 농수산업을 중심 축으로 농수산물 또는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가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거나 농촌형 관광휴양산업, 즉 가족호텔이나 종합 민박센터, 장기체류 휴양시설, 레저스포츠 시설 등 1차, 2차, 3차 산업을 한데 묶는 농촌중심의 산업복합화로 전통적인 농어촌을 개편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 동안 간간이 주장되어 온 첨단무공해 산업인 반도체와 정보산업을 유치하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국내 경쟁에서 제주도가 육지부에 비교우위를 유지해 온 산업인 농업과 관광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역시 국내경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상의 기초지표는 90년도 기준의 42%에 이르는 1차산업의 고용인구비중을 2001년에는 29.5%로 낮추고 대신 3차산업의 고용인구 비중을 90년도 54.2%에서 역시 2001년도에 이르러 66.6%로 높이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취지는 개방화에 따라 발생하는 1차산업의 이동인구를 3차산업으로 흡수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계획안에서 산업구조도 1, 2, 3차 산업비중이 각각 27.1%, 6.1%, 66.6%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1인당 GRP도 90년도 327만원에서 2001년에는 1,349만원으로 연평균 성장율이 15%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교통시설의 발달 그리고 정보 통신시설의 발달로 오늘날 세계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좁혀지고 있다. 지

난날 고립되어 있던 외딴섬은 세계체제 속에 얽혀 들게 되었고 그곳의 경제는 세계시장의 동요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결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간 세계무역 질서를 지켜 온 가트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협력시대를 이끌어 갈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경제가 이제 국경 없는 무한경쟁체제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체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제주 농업도 시장개방의 일시적인 충격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쟁전략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정책적으로는 농업부문의 대대적인 재정적 투자와 수준 높은 수출전략, 그리고 탄력적인 대응능력을 갖춘 정책개발이 필요하겠지만 농민들 측에서도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전략, 경쟁적 유통개선 전략을 갖추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 제주 농민들은 수입개방이라는 시련의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개방의 피해를 단기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주 농업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전면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여기에서 감귤이 갖는 중요성은 제주 농업의 생존의 문제로 여겨질 정도이다. 감귤은 과거에 생계작물과 같은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제주 감귤이 바로 제주 농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감귤산업은 재배면적 21,727ha에 재배농가 29,541호가 참여하여 연 75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과일 소득만으로도 4,20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서 제주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금액은 제주도 농업 총소득의 67%에 이르는 것이고 부대사업에서 얻어진 소득을 합하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제주지역 경제의 기틀이 되고 있다. 또한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의 사과 생산량보다는 많고 가공물량으로는 전국 과일 가공량의 68%나 되며 운주밀감 품목으로는 세계 제2위에 해당되어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국제수준의 국가단위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감귤은 관리, 채수, 선과, 포장 등의 부문에서 높은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가공 및 운송 등 관련사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여기서 얻어질 소득은 거의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어 국제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작목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한편 근래 외국산 과실과 가공품의 다량 수입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감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즉 청과물 단일 품목으로서 감귤 생산량은 1인당 적정 소비량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서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가격의 하락과 각종 자재 및 노임이 상승되어 실질 소득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생산체계를 변화시켜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바나나, 파인애플, 그레이프 후르츠 등의 외국산 과일수입 증가로 감귤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오렌지쥬스의 다량 수입은 감귤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경쟁 과실인 사과, 배, 단감 등이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고급화되어 감귤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어서 외국산 감귤류와 경쟁하기에 앞서 우선 국내산 과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할 입장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제주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의 제주 감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며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UR협상 타결로 감귤은 경쟁력 배양을 위해 도민들이 요구하던 유예기간은 고사하고,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E)란 명목으로 부과하려는 고율의 관세마저도 부과하기 어렵게 되었다. 97년 7월부터 외국산 감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이제 농민들의 관심은 제주감귤이 과연 일부의 주장처럼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쏠리고 있다. 제주감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으로 압축되고 있으며 경쟁 품종으로는 온주, 오렌지, 탄재린, 마다린 등이 열거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행 식물검역법상 귤파리병 등으로 인해 수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가장 무서운 경쟁국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와 수출경쟁에서 제주감귤은 가격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나, 품질면에서는 경쟁 대상국의 감귤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감귤 자생력 배양의 첫걸음은 고품질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감귤의 고품질화만 가능하다면 생산시기를 조정하고, 공세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수출창구의 다변화를 기할 경우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제주 감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면 밀식과원, 저품종과수, 격년마다 찾아오는 해거리와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의 문제들이다. 이중에서도 중대한 문제거리인 품질저하를 부추기고 있는 밀식과원에 대한 간벌은 품질향상과 더불어 적정생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계화영농을 가능케 해 생산비 절감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간벌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감귤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행정 차원의 시도를 보면 제주도는 오는 2001년까지 감귤 적정생산량을 65만톤으로 잡고 재배면적을 2만ha로 축소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 계획 속에 밀식과원, 부적지 과원은 간벌 또는 폐원을 단행하고 타 작목을 입식 함으로써 감귤의 고품질을 이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시기별 품종을 재안배하고, 우량품종으로의 갱신작업을 벌여 나가 현재 전체 생산량의 39%를 차지하는 보통 온주를 감축하고, 조생종과 극조생종 그리고 만감류로 전환하고 또 출하시기를 조절할 경우 연중 출하가 가능하며 미숙과 출하를 방지할 경우 소비확대까지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국내산 출하시기를 피하는 시차별 수입제를 도입하여 수입할 경우 외국산 감귤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임이 상승하여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경영비 중 30%에 이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시설을 적극 도입하고 약제 살포기, 무인방제기,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최신 시설

을 갖춰 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인력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달성하고 개방화시대에 감귤의 자생력 배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에 알맞은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및 유통기반을 재정비함으로써 품질의 향상과 경비의 절감을 이루어 내어 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배기술의 개선 특히 시설재배를 통한 품질향상과 다양한 품종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측을 통해서 수요를 확대시키려는 종합개발계획의 구상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즉 지역적 여건에 부적합한 품종으로 알려진 온주를 우량 품종으로 갱신하므로써 생산량의 조정과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와 실증재배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장려품종을 지정하여 권장한다. 우량묘목의 공급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모수원의 설치, 불량 온주를 축소하고 고당계 신품종으로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묘목 500만본을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들이 현재 도 당국의 추진 사업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밖에 다양한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취약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잉생산은 품질의 저하 및 가격하락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생산량을 조절하여 현재 75만톤에서 60-65만톤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재배면적 2만ha를 유지하면서 간벌을 실시해서 10a당 3톤을 생산하고 수량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품질 위주의 생산방식으로 유도하며 시장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확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안 등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이 감귤 재배의 북방 한계선에 위치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상 여건이 감귤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귤재배 부적지는 기상 재해지구와 고지대가 된다. 신규로 감귤원이 조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감귤원 신규 조성예의 모든 지원을 억제하며 관수 및 농약살포를 위한 다목적 스프링 콜러를 설치하고, 대형방제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그리고 화학비

료의 과용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고 지력이 약화되어 생산성 저하는 물론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토양개량사업의 추진을 통해 감귤원의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해 나가는 전략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이며 감귤 출하의 주체인 작목반을 개편하여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이원화된 감협과 농협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분리되어 있는 감귤작목반을 개편하여 단일작목반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감귤의 유통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가장 먼저 처리되어져야 할 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는 농협산하에 277개, 감협산하에 210개의 감귤작목반이 결성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같은 마을에 3-4개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여러 작목반에 가입하고 있어서, 극소수의 작목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목반은 출하주체로서의 자립기반이 빈약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작목반들을 대형 선과장을 중심으로 일개의 대단위 작목반으로 개편하고 법인화 시켜 자체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감귤작목반을 통합함으로써 작목반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한편 작목반 별로 고유한 상표를 지정하여 생산지별로 감귤을 출하하도록 유도하여 출하 감귤의 상품성과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제주지역 개발과정에서 농업부문에서의 단작화와 시장의 종속으로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게 됨으로써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제주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가지로 제시되었고 또 더 많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구현되거나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 고안된다고 하여도 농촌에서 그것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촌에 남아 있어야 하고 농민들이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주감귤이 현재 외국산 감귤에 비해 취약한 것은 자명한 일이나, 이는 우리 농가가 어느 만큼의 자생력을 확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경

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감귤수입의 개방의 위기를 오히려 제주감귤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농가들의 의지가 살아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건전한 경쟁정책이 마련되면 경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의 취향이 다양해져서 시장은 더욱 세분화될 전망이다. 경쟁은 세계화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매체의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과 제품 사이의 거리를 없애고 고객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전략을 탄탄히 구축할 때 제주 농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시장경쟁 전략을 개발하는 문제와 고품질의 상품 생산의 전략을 동시에 세워 나갈 경우 그리고 농민들이 변화하는 시장동향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갈 때 제주 농민경제의 미래는 장미빛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준희

1984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 『인류학논집』 제7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오석민

1986 “제주도 감귤 재배지의 계층구성 및 임노동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광규

1984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제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기욱

1984 “도서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제주도 인근 K도를 중심으로”, 『인류학논집』 제7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이청규

1985 “제주도 선주민 문화에 대한 일고찰: 고고학 측면에서”, 『제주도연구』 제2집, 제주도연구회.

제주도

1982 『제주도지』 (전2권).

1993 『제주도지』 (전3권).

제주상공회의소

1991 『제주상의50년사』, 제주: 일신옵셋인쇄사.

조혜정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성별분업에 근거한 남녀평등에 관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북편, 서울: 심설당.

1988 “발전과 저발전—제주해녀사회의 성체제와 근대화”, 『한국의 남성과 여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현길언

1986 “제주전설과 제주사람들의 삶의 양식”, 『제주문화의 재조명』, 양순필외 지음, 서울: 도서출판 일념.

Finney, Ben R.

1973 *Polynesian Peasants and Proletarians*,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Kroeber, A. L.

1948 *Anthropology*, Calcutta: Oxford & IBH Publishing Co.

Scott, James C.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

iversity Press.

Shanin, Teodor

1973 Nature and Logic of the Peasant Economy, *Journal of Peasant Studies* 1(1):63-80.

Wolf, Eric R.

1966 *Peasant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Peasant Economy in Cheju Island

Lee, Ki—Wook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explain the results of the penetration of capitalism into agricultural sector and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local development on the sector of the peasant economy.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developments of Cheju Island pu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focused on showing how Cheju Islanders in question for this study are in the grip of world-wide economic forces, and how these forces are fundamentally altering their ways of economic life. The strategy for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the standard anthropological techniques of fieldwork and a hypothesis of economic vulnerability.